

ISSN 2734-0686

국제전략 Foresight



Vol. 01
2020. 09. 24

www.nafi.re.kr

미·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유재광 (前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제전략 Foresight

2020. 09. 24

Vol. 01

ISSN	2734-0686
발행일	2020년 09월 24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제전략 Fore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수시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 보고서로서, 미래연구원 내·외부 전문가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미래를 전망하고 국가차원의 국제전략을 제시합니다.

미·중 경쟁 시대의 한국의 안보전략

前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재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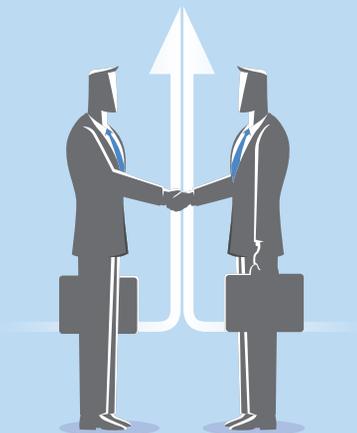
- I.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 안보환경의 변화
- II.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국익 그리고 안보전략
- III. 한국의 대(對) 미국 안보전략
- IV. 한국의 대(對) 중국 안보전략
- V. 한국의 대(對) 북한 안보전략
- VI. 한국의 대(對) 일본 안보전략
- VII. 결론

참고문헌

무정부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국제정치에서 각 국가의 최고 핵심이익인 안보 (security)는 해당 국가 스스로가 책임진다.

이 경우 보통 한 국가가 얼마나 안보이익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의 여부는 그 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안보 환경상의 제약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보전략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이 마주한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즉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속에서 한국이 안보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 심화가 한국 안보의 관련 주요 이해관계 당사자-즉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일본-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이들 국가별 맞춤형 중장기 안보전략을 개발한 후 이 전략들이 어떻게 향후 한국의 중장기 안보이익 극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I.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 안보환경의 변화

한국을 둘러싼 안보환경 (security environment) 이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한 세기에 한 번 목도하기 힘든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점점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패권경쟁의 심화는 그동안 국제정치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까지도 중국과의 관계개선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견제와 관여정책 (balancing with engagement)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미국의 대응에 과념치 않고 거의 전 분야에서 걸쳐 팽창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이후 미국은 중국 길들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 안보, 경제 그리고 기술 등 미·중 양자 관계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패권국으로 급부상 중인 중국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강 대 강 대치는 안보 분야에서는 남중국해 대립 심화로 경제 분야에서는 무역 전쟁으로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는 5G 기술 전쟁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고 협력하는 분야를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코로나 (COVID-19)의 대유행인 팬데믹 (Pandemic)은 이 과열된 패권경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

II.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국익 그리고 안보전략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심화는 한국의 안보이익-즉 생존-과 이 이익의 극대화 수단인 전략개발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안보이익은 개별 국가들의 국익 중 최상의 이익이다.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생존이 보장된 후에야 다른 국익들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문화적 번영 및 영향력 확대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이 지금 당연히 누리고 있는 생존이라는 국익이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로 침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정확한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미·중 경쟁의 심화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양자택일의 압박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선 전통적 우방국인 한국을 대중 봉쇄에 이용하려 할 것이며 중국은 지난 30년간 발전한 한·중 양자 관계 발전의 동력을 살려 한국을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떼어 놓으려 할 것이다.

몇 가지 예만 들더라도 미국은 이미 대중국 봉쇄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the Indo-Pacific Strategy)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했으며 남중국해 분쟁에서 한국이 항행 자유 (freedom of navigation) 로 대변되는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 주길 원하고 있다. 중국은 반대로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참가를 매우 경계하고 있으며 남중국해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중국의 문제라고 못 박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장기 미래에 이런 급변하는 안보환경의 제약하에 생존이라는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안보상 국익은 외침 방어를 통한 생존 가능성 극대화이며 이 이익을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 속에서 실현해야 한다. 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일련의 행동계획이 소위 말하는 안보전략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The Indo-Pacific Strategy)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가 베트남 방문 당시 그 청사진을 발표한 미국의 대전략으로 표면적으론 인도 태평양지역 대다수 국가들의 번영과 안전을 위한 새 행정부의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실체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지역에 위치한 민주주의 동맹국-특히 호주, 인도, 일본-과 협력하여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대중국 견제전략이다.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전략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Barack Obama)의 아시아 중심축 전략 (The Pivot to Asia) 혹은 아시아에서의 재균형 (Rebalancing in Asia) 전략의 확장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전략은 특히 국내적으론 서로 대립하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이 적어도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견제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Ⅲ. 한국의 대미 안보전략

한국의 대미 안보전략 수립과 관련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다. 트럼프의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은 초당파적 (bipartisan) 지지를 얻고 있으며 이 흐름은 민주당이 집권하여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무역과 기술은 물론 안보 분야에서도 전방위적 대결정책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 경제와의 디커플링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대결정책은 한국의 대미국 안보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중국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동맹국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지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삼각 동맹으로 묶여있는 일본과의 관계개선 역시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안보환경 변화의 와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미국의 점증하는 대중국 견제전략에의 참여 요구를 극복할 동맹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거대한 영토에 급격한 군사적 부상을 하고 있지만 최고 지도자의 외교정책이 대중들의 정치적 책임추궁으로부터 단절된 특성상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안보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미 급증한 경제의존도로 인해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하는 것이 한국이 마주한 엄연한 현실이다.

이 모순적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은 좀 더 섬세한 대미 안보전략을 펼쳐야 한다. 미국이 요청하는 동맹국의 역할 주문-특히 동맹 비용 부담과 국제차원의 평화유지 노력-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미국의 양자택일 요구가 증대할 경우 한국이 처한 현실-즉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과 한국 경제의 높은 대중국 의존도-을 설득하면서 조건부 한미동맹 강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이 동북아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이익을 '명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한·미 동맹의 군사적 요소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두 번째로 한국은 미국이 외교적 해결에 기반한 평화적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 사실화된 현재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남겨진 옵션이 전면전과 군사적 억지 그리고 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세 가지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한 평화에 비해 전면전과 현상유지 모두 미국은 막대한

비용을 감내해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전략적 판단을 미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미국 정부가 정권과 상관없이 대화 및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속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대응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미국의 군사대응 위협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지향적 전략이다.

세 번째로 한국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독자적인 안보전략 강화를 약속받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아울러 중국의 급격한 군사적 부상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한국입장에선 장기적으로 독자적 군사 운용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극단적인 가정으로 한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 제도화에 성공한다 해도 한국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이를 빌미로 평화헌법을 개정해 정상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일본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위협에 대한 유일하고 항구적인 대안은 한국이 독자적 안보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전시작전권 이양을 서둘러야 하며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고유의 전략자산 개발 및 보유에 대한 권리도 인정받아야 한다. 법과 질서를 강제하는 중앙 정부가 없는 무정부적인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믿을 것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안보 능력을 지닌 주권국가이고 한국은 이를 중·장기 안보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커플링 (Decoupling)

최근 들어 언론 및 학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디커플링이란 이전에 경제적 교역으로 상호 의존하던 두 개의 국가가 전략적 이해관계의 변화로 인해 이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나아가서 양국의 경제를 탈(脫) 동조화하려는 정책을 말한다.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로 인해 이미 미국 내부의 강경론자들은 기존의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정책 대신 디커플링 전략을 집행하여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에서 역시 미국과의 경쟁이 점차 심화 되자 대미국 경제 디커플링을 통해 내수기반의 경제성장과 미국 이외 제3의 시장개척에 나서자고 주장하고 있다.

IV. 한국의 대중국 안보전략

중국은 여전히 패권 추구 의지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공세적 태도, 동중국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현상유지 파괴 시도, 그리고 미국발 무역 전쟁에 대한 강대 강 대치는 중국의 패권 추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을 다방면에서 자극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 전면적 대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현재 시진핑 정부는 ‘공산당의 영도’의 강화를 주창하면서 권력의 집중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등 체제의 경직성을 최고조로 올리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부 결속 다지기과 체제 경직화는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함에 있어 중국 정부의 합리성과 유연성을 잠식할 것이다.

이렇게 경직화되어가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안보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중국의 급증하는 한국 위협론 잠식시키는 전략이다. 사드 (THAAD) 배치로 최고조에 이른 이 위협론은 그 배경에 한국의 대북 역지를 위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사드가 대중국 견제용이 아닌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임을 중국 측에 설득하고 그 배치 속도 역시 조절할 전략적 행보가 필요하다.

두 번째 많은 수의 중국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중국과의 고위급 채널 확충에 힘써야 한다. 한국은 향후 미·중 관계의 유동성에 따라서 한·중 양국의 선의와는 별개로 다시 쟁점이 될 사안들이 적지 않다. 남중국해 문제, 화웨이(Huawei) 사태와 같은 기술표준 선택의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 무거운 이슈들이 한중관계를 언제 다시 압도할지 모른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 개발 시 중국정치의 특수성을 고려 철저히 고위급 소통 채널을 제도화해야 한다. 소통 채널의 제도화는 위에 언급한 문제들이 한국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외생성이 강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

세 번째로 대중국 의존도 줄이기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심각한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자산보다는 위협이다. 미·중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을 것이고 북핵 위협은 더 고도화될 것이다. 당연히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이용 한국을 대중국 압박의 전초기지로

사용할 인센티브는 커진다. 이 경우 제2, 제3의 사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며 이때마다 한국의 높은 대중국 경제의존은 중국의 경제제재 유인을 증가시켜 한국에 위협을 줄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안보전략 차원에서 중국에의 경제의존도를 줄이는 중장기 전략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이 대중 외교에서 독자적 전략 가치를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중국의 주변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한국의 위상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간의 패권경쟁 심화 와중에도 이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다수의 평화 지향적 국가들이 존재한다. 이들 국가들과의 연대 형성을 통해 한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협력을 제도화해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 될 경우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해야 한다.



V. 한국의 대북 안보전략

북한의 중장기적 측면에서 핵무기 고도화를 통한 생존이익 극대화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두 번에 걸쳐 권력 세습에 성공했다.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할 때 2019년 말 경 내부 체제의 안정 수준이 상승하였고 북한경제는 계획경제 중심에서 국가통제와 제한된 시장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로 변화했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수령 독재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선군정치를 거쳐 민간인 주도의 통치체제가 수립되었다.

북한이 한국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동안 현저하게 핵 및 미사일 능력을 신장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기로 김정은은 2018년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다. 북한은 앞으로도 수령 독재를 유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수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대내외적 변화를 주려 할 것이다.

향후 북핵 문제에 관해 완전 해결, 부분 해결 혹은 미해결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은 어떠한 시나리오로 전개되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 전략을 최상의 목표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안보전략이 핵과 미사일 위협에 기반한 끊임없는 군사적 긴장 조성임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안보전략을 고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확장 억지력을 통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실질적인 군사력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의 대북한 군사력 사용 억제와 외교적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외교적 협상 전략 역시 병행해 나가야 한다. 이 협상 전략은 미래 남북관계의 예측치 못한 변화를 관리하고 주변 강대국 역학관계에서 오는 변화로 북한이 좀 더 과감한 평화공세에 나설 경우를 대비한 전략이다.

아울러 한국은 대북한 정보수집 및 감시능력 고도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북·미간의 2차례 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이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고 평화조약 및 관계 정상화를 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동안 북한은 핵 능력의 고도화에 필사적으로 매달릴 것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뿐 아니라 그 추적이 매우 어려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개발도 곧 가시화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 한미동맹에 근거 북핵 억지력을 유지하되 대북한 '감시'역량을 크게 끌어올리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VI. 한국의 대일 안보전략

21세기 들어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미·중간 패권경쟁이 전개되면서 일본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정경분리’ 원칙에 근거하여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공조하고 경제적으로 중국과 협력 면을 넓혀가는 이중전략을 펴왔는데 미·중 패권경쟁 심화에 따라 안보와 경제전략을 미국에 일치시켜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일본 내부의 문제 즉 경제의 상대적 쇠퇴, 인구감소와 고령층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용의 급격한 증가라는 두 가지 문제로 인해 방위비 증가를 통한 적극적 안보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국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은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비해 미·일 동맹 강화함과 동시에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에 참여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분쟁으로 비화 될 시 미국 편에 설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적 실익 때문에 잠시 중국과 밀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현재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더 공고히 하고 나아가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 축소에도 대비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일본 안보전략 기조 기존의 한·미·일 삼각 동맹의 복원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어떤 유형의 패권 국가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힘의 균형을 뒤흔들지 않은 자비로운 패권국이 될 수도 있지만 광활한 영토와 급격한 군사력 성장 여기에 더해 외교·안보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책에 민주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국내정치 구조상 현상유지를 타파하려는 공세적 패권국이 될 가능성도 크다. 한국은 후자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 한·미·일 삼각 동맹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가능성 역시 이 동맹 구조를 지속해야만 하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하루빨리 한·일 양자 관계에서 영토 및 역사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현 상황은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 자세로 인해 한국이 지속적으로 대일본 안보협력에 소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정치적으로 양국 지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정책이겠지만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에 필수적인 양국 간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물론 한국의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한 일관적인 사죄는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하지만 아베 정부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스가 정부 역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 고위급 대화 채널을 형성하여 한편으로 징용문제-

수출규제-지소미아 3종 세트를 푸는 공식 대화를 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한·일 안보협력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 여기서 입법부, 국회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국회는 체면과 자존심을 중시하는 행정부에 비해 창의적인 정책 시도가 가능한 곳이다. 이미 현 자민당 정부의 사죄요구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행정부 대신 국회가 양국 간 선택지를 넓히는 역할을 전략적으로 구사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중·장기적 입장에서 일본을 향해 규칙기반 질서의 복원과 유지를 위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등 대외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진 중견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에서 나오는 절대적 이익을 필연적으로 공유한다. 이는 이러한 질서의 복원이 두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사활적 조건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비판도 규칙기반 질서 수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맞보복을 자제하고, 스스로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대인배 입장에서 일본을 다루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VII. 결론

무정부성을 그 핵심특징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안보이익 즉 생존은 모든 국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극대화하려는 이익이다. 한국의 이 이익은 다방면에서 위협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북한발 핵 위협과 군사도발, 중국의 급격한 패권국 진입과 미·중 경쟁 격화, 일본과의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정상국가 진입의 노력 등의 위협이 한국이 안보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국익 극대화의 수단인 중장기 안보전략을 주요 국가별로 도출하였다.

미국과 관련해서 한국의 중장기 안보전략은 이웃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미세한 동맹 관계의 조절과 독자적 군사 능력 확보 전략을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 전략자산 배치와 관련된 중국 의구심 해소와 고위급 대화 채널 제도화 그리고 경제적 의존 줄이기를 대표적 전략으로 도출하였다. 북한 문제에서는 군사적 억지에 기반한 대화 지속 전략과 고도화된 감시능력 강화전략을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과거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한·미·일 삼각 동맹 복귀전략을 도출하였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양자 관계에서 도출된 전략 간의 정합성 문제이다. 한국의 대미전략이 한국의 대중전략 대북전략 대일전략과 상충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한국의 안보이익을 설정하고 이를 중장기 차원에서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략을 일련의 양자 관계에서 도출하고 이들 간의 정합성을 확인하였다. 미·중 패권경쟁이 촉발한 거대한 한국 안보환경의 변화에서 이 전략들은 한국의 핵심국익-즉 생존-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익 실현에 봉사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철희. 2018. “아베 시대 자민당 우위체제 재구축 전략: 역사적 전개와 지속 가능성.” 『아태연구』 제25권 3호
- 설인호. 2019. “트럼프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개방향 및 시사점.” 『국방논단』 제17권 40호
- 유재광. “미국 아시아 재 균형정책 두 개의 시각.” 『국제정치논총』 제56집 4호 (2016)
- 이동률. 2019.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현대중국연구』 제21권 1호
- 전재성. 2016. “5차 핵실험 이후의 북한 핵문제와 우리의 대응 전략 방향, 전략연구 제23권 제3호
- Clinton, Hillary. 2011.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October 11.
- Frankel, Francine R. 2011. “The Breakout of China-India Strategic Rivalry in Asia and the India Oc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64 No. 2.
- Friedberg, Aaron. 2005. “The Future US-China Relations: Is Conflict Inevitable.” International Security Vol. 30, No. 2.
- He, Yanan. 2007. “History, Chinese Nationalism and the Emerging Sino-Japanese Conflict.”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6, No. 5.
- Mearsheimer, John J. 2006. “China’s Unpeaceful Rise.” Current History 105 (690).
- Waltz, Kenneth N. 2000.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5, No. 1.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 Fax 02-786-3977